

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

-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는 순조로운 연착륙 추세
- 만기연장·상환유예 지원대상은 지속 감소 중으로,
'22.9월 100조원, 43만명 → '23.3월 85조원, 39만명 → '23.6월 76조원, 35만명

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(협회)은 '20.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해 「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·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」를 시행해 왔다.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연장되어, 지금은 '22.9월 5차 연장시 발표된 「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」(이하 '연착륙 지원방안')에 의해 운영 중이다.

※ 만기연장·상환유예 5차 연장(연착륙 지원방안) 주요 내용

- ①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만기연장은 3년(~'25.9월), 상환유예는 1년(~'23.9월) 추가 지원
- ② 상환유예 차주는 상환계획서를 원칙적으로 '23.3월말까지* 작성
 - * 재약정 만기가 '23.6월 이후 도래하는 차주는 만기 2개월 전까지 작성
- ① 거치기간(유예된 이자)은 최대 1년, 상환기간은 최대 5년(60개월) 부여
- ② 금융기관·차주는 **최적 상환방안을 협의**(컨설팅 제공)

‘연착륙 지원방안’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 먼저, 만기연장 차주는 '25.9월까지 만기연장 여부에 대한 불안감 없이 현행 만기구조(6개월 또는 1년)대로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.

상환유예 차주는 '23.9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,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. 상환계획서에 따라 상환유예 차주는 '28.9월까지 최대 60개월(5년)간 유예된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, 유예된 이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.

만기연장·상환유예 지원대상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. '22.9월말 약 100조원, 43만명이었으나, '23.3월말 약 85조원, 39만명으로 감소하였으며, 다시 '23.6월말 약 76조원, 35만명으로 감소하였다.

< 만기연장·상환유예 지원 추이 >

(단위 : 조원, 만명)

구 분	'22.9월 지원대상		'23.3월 지원대상		'23.6월 지원대상	
	대출잔액	차주수	대출잔액	차주수	대출잔액	차주수
① 만기연장	90.6	41.3	78.8 (92%)	37.5	71.0 (93%)	34.0
② 상환유예 ¹⁾	9.4	2.4	6.5 (8%)	1.6	5.2 (7%)	1.1
②-① 원금상환유예 ²⁾	7.4	2.2	5.2 (6%)	1.5	4.1 (5.5%)	1.0
②-② 이자상환유예 ³⁾	2.1	0.19	1.4 (2%)	0.11	1.1 (1.5%)	0.08
합계	100.1조원	43.4만명	85.3조원	38.8만명	76.2조원	35.1만명

- 1) 상환유예 : 상환유예 차주는 원칙적으로 '23.3월말까지 상환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, 재약정 만기가 '23.6월 이후 도래하는 차주는 만기 2개월 전까지 작성할 수 있음
- 2) 원금상환유예 :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원금 납부만 유예하고 이자는 정상 납부
- 3) 이자상환유예 : 만기일시상환대출 또는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이자 납부를 유예

만기연장·상환유예 지원 대상은 '22.9월말 대비 '23.6월말 약 24조원, 8만명이 감소되었다. 이는 대출잔액 기준 24%, 차주수 기준 20% 감소한 것이다.

①만기연장은 19.6조원, 7.3만명 지원 감소되었으며, 감소된 대출잔액의 대부분 (92%)은 정상 상환 또는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②-① 원금상환유예는 3.3조원, 1.2만명 지원 감소되었으며, 감소된 대출잔액의 51%는 상환을 개시한 상태이고, 42%는 상환을 완료하였다. ②-② 이자상환유예는 1조원, 1,100명 지원 감소되었으며, 감소된 대출잔액의 52%는 상환을 개시한 상태이고, 37%는 상환을 완료하였다. 상환유예 차주 대부분 자금상황 개선, 고금리 부담, 대환대출(저금리 대환 포함) 이용 등으로 상환을 개시 및 완료하였으나, 일부는 연체·휴폐업으로 지원이 중단되어 상환을 개시한 경우도 있었다.

한편, 전체 지원 감소 대출잔액 약 24조원 중 채무조정액은 1.6조원이었으며, 이 중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이 1.55조원으로 대부분(98%)을 차지했다.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152억원으로 전체 채무조정의 1% 수준이었다.

'23.6월말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의 98.1%(10,902명/11,111명)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, 원금상환유예는 99.0%(10,263명/10,366명), 이자상환유예는 85.8%(639명/745명)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하였다. 특히 은행권에서는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 중 대부분인 99.6%(10,155명/10,194명)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하였다. 상환계획 미수립 차주 약 200명에 대해 금융회사와 차주 간의 협의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만기연장·상환유예 연착륙 현황을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.

①만기연장 대출잔액은 '22.6월 만기연장·상환유예 대출잔액 76.2조원 중 93% (71.0조/76.2조)로, '25.9월까지 계속 지원되며 이자를 정상 납부 중이다.

②-①원금상환유예 대출잔액은 전체의 5.5%(4.1조/76.2조)로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이 가능하며, 대부분의 은행에서 원금상환유예를 자체적으로 연장 지원하거나, 상환 초기의 원금상환 부담을 줄여 연착륙을 지원하고 있다.

②-②이자상환유예 대출잔액은 전체의 1.5%(1.1조/76.2조), 차주는 800명 규모로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있으나, 불가피한 경우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,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다.

금융위는 금감원 및 금융권 협회와 협조하여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 차주별 면담을 실시하고 상환계획서를 보완하는 한편,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연착륙을 지원 중이다. 특히 약 800명 규모의 이자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세심한 1:1 차주별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.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권주성 (02-2100-2780)
		담당자	사무관	유승은 (02-2100-1662)
	금융감독원 감독총괄팀	책임자	사무관	최형우 (02-2100-1661)
			국 장	홍석린 (02-3145-8300)
		담당자	팀 장	변재은 (02-3145-8001)